 국토교통부	보도설명자료	
	배포일시	2020. 12. 18(금) / 총 4매(본문2)
담당 부서	도시재생정책과	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장 황윤언, 서기관 박현근, 사무관 박선영 • ☎ (044) 201-4903, 4904, 4907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본격적으로 속도를 내고 있으며,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가시화되도록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 (SBS 8시 뉴스, 12.17) >

◆ 3년차 지지부진 도시재생뉴딜사업,, 작년까지 평균 실집행률 54.6%
입지선정 기준이 너무 낮아, 쇠퇴도가 양호한 지역도 사업 선정

□ **(추진현황)** 도시재생뉴딜사업 초기에는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철저한 사업관리를 통해 부진사업이 정상화되고 집행률도 제고되고 있습니다.

○ 초기에는 선정 이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부지를 매입하는 등 사업착수에 장기간 소요되었으나, '19년 이후에는 활성화계획이 구체화되고 부지도 확보된 사업을 위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 필요부지의 60% 이상 확보한 경우만 선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사업은 통상 80% 이상의 부지를 확보하였음

○ 이에 따라 사업초기('18) 집행률은 22.8%였으나, 금년말에는 80% 내외로 전망됩니다.

* '17~'20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연도별 실집행액/집행률
524억 / 22.8%('18) → 4,769억 / 70.1%('19) → 5,800억 내외 / 80% 내외('20년말)

** 보도에서 언급된 국비 평균 실집행률 54.6%는 '18년부터 '20.11월까지의 실집행률을 평균한 것으로 연차별로 실집행률은 대폭 상승하고 있습니다.

□ **(쇠퇴도 진단)** 도시재생법령상 쇠퇴요건(인구감소 등)은 쇠퇴지역을 지정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실제 쇠퇴지역 또는 사업 선정시에는 다양한 지표와 지역여건 등을 종합 검토하고 있습니다.

○ 각 지자체는 도시재생전략계획을 통해 다양한 지표*를 활용하여 지역별 쇠퇴도를 진단하고 있으며, 쇠퇴지역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에는 이들 지표와 함께 지역현황**, 주민참여도 및 도시재생역량 등도 적극 고려하고 있습니다.

* 노령화지수, 세입·자가비율, 재정자립도, 지가변동률, 공가·공실률, 접도율 등


** 수해·화재 등 재해위험이 높은 지역, 지역자산 등을 활용한 도시재생 잠재력이 있는 지역, 주거환경 관련 민원 과다발생 지역, 교통 등 기반시설 여건이 불량한 지역 등

○ 특히, 각 지자체는 쇠퇴진단에 포함하는 지표와 가중치를 지역 실정에 맞춰 설정하고 있으므로, 지자체별 쇠퇴도를 단순 수치로 비교하기는 곤란합니다.

* (예시) 대도시 A시는 산업경제에 더 가중치를 두고 있으며, 산업경제 쇠퇴 분석시 고차산업종사자, 지가변동 등을 반영하나, 인구 10만이하인 B군은 인구현황에 더 가중치를 두고 고령인구수, 독거노인비율 등을 우선 반영

○ 참고로, 국토부는 지자체가 걱정하는 쇠퇴진단을 통해 쇠퇴지역 (활성화지역)을 선정할 수 있도록, 그간의 사업경험 등을 반영하여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 앞으로도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 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빠르게 확산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함께 사업관리도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도시 재생정책과 박현근 서기관(☎ 044-201-4904), 박선영 사무관(☎ 044-201-4907)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

참고

도시재생뉴딜 그간의 성과

□ '20.11월 현재까지 181개 지자체에서 총 354곳의 사업 진행중

* 선정사업 수 : ('17) 68 → ('18) 100 → ('19) 116 → ('20.11) 70(연말 추가 예정)

○ 금년, 경남하동을 포함한 4곳의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준공 예정

< 연도별 완료 예정 사업 현황 >

구분	'20년	'21년	'22년	'23년
뉴딜사업	4	25	65	100
뉴딜사업 이전	2	25	5	-
합계	6	50	70	100

* 사업별 추진상황에 따라 완료시기는 변동 가능

□ 각 사업은 유형별로 다양한 세부사업(총 2,500여개)을 포함하고 있으며, 금년말까지 500여개 완료 예정

주요 세부사업	계획 반영 사업수	'20년까지 실적
공공임대주택	1.6만호	1.3만호 착수, 1.1천호 준공
소규모주택정비	4.2천호	2.4천호 착수, 165호 준공
빈집 정비	1.3천호	950호 착수, 75호 준공
어울림센터	250개	170개 착수, 12개 준공
생활SOC	900개	600개 착수, 170개 준공

□ 물리적 재생 외에도 지역주민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재생 대학 등을 확충하고, 예비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도 육성

* 도시재생지원센터 406곳, 도시재생대학 183곳 운영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총 2.3만명 수료

** (예비사회적 기업) 158개 지정,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설립

○ 현재까지 약 2만명*의 일자리를 창출한 것으로 추산, 진행 중인 사업이 완료될 경우 창출 규모는 약 7.4만명으로 확대 기대

* (공사단계) 1.3만명, (운영단계) 7천명(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등)



도시재생사업지 <누적>



전국 각지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새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



주거복지로 삶의 질이 높아집니다

우리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2017년부터 시작된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전국 181개 지자체의 354곳에서 현재 진행중으로 공공임대주택과 생활SOC를 조성하는 2,500개 세부사업이 추진중이며 2020년 6곳에서 완공됩니다.

도시의 활력이 돌아와 일자리가 생깁니다

기금 지원 확대로 지역 투자 활성화



도시계정 출·용자 2조원, 총사업비 7조원

사회적경제조직 육성

- 예비사회적기업 158개 지정
- 마을관리협동조합 14개 설립

일자리 창출효과 (사업 완료시)

- 약 7만명으로 추산
- 운영단계 1.4만명 [지원센터, 시설 운영·관리 등]
- 공사단계 6만명 [건설업 취업유발계수 적용]

지역의 주민역량이 강화됩니다

소규모재생사업 등 주민역량강화사업

414곳 지원 → 91개는 뉴딜사업으로 연계, 31개는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발전

도시재생대학 183곳, 도시재생지원센터

406곳 운영 → 대상별 맞춤형 교육 총 2.3만명 수료

전문인력 양성사업

6개 대학 선정 → 매년 120명 내외 석·박사급 전문가 배출

청년 인턴십

885명 선발 일경험 수련